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원 내 시위

KTX 해고 승무원들이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법원 청사 내에서 약 3시간 기량 기습 시위를 벌였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3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한수 부장판사와의 면담을 약속 받고 자진 해산했다.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법정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김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약 20여명이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는 대법정 안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 내 대법정에서 시위가 벌어진 것은 대법원 사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측은 당초 비서관을 통해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KTX 해고 승무원 측은 권한 있는 책임자를 요구하며 2시간여분 간 대법정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 오후 2시께 대법원 공보관과 기획총괄실의관이 KTX 해고 승무원 측과 협의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으로 오후 2시13분께 상황은 마무리됐다.

김승하 KTX승무지부 지부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에서 사법단을 벌였다는 게 드러났고 KTX 승무원 사건도 포함된 민족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할지 김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 관계로 저희는 동료를 잃었고 아직까지 서울역에서 전막성을 하고 있다”면서 “항상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꼭 대답을 듣고 싶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울먹였다.

대법원 측은 대법원장이 재판을 주제하는 제판관으로서 법정 외 만남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되 무게감 있는 관계자와의 면담을 제안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책임자로 있던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해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을 이유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매어 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에 빠뜨렸다”며 “그로 인해 승무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누

‘양승태 사법권 남용’ 대법원장 면담 요청
해고 승무원들, 구속수사 촉구 “고발조치”
비서실장 면담 약속 후 시위는 자진 해산

가 이 어울한 복슬과 승무원들의 불행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권력과 자본의 입맛대로 판

결하거나 하급심 판결에 개입하기 도 했다”며 “경찰은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학법질서를 어지럽힌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준법을 미치는대로 양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을 즉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7월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 기조에 맞게 신고됐다고 평가한 판결들이 나열돼 있고 KTX 승무원 사건도 포함돼 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도 정부에 협조해온 사례로 언급돼 있다.

뉴시스



실전처럼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앞둔 29일 오전 경기 용인 캐리비안 베이에서 라이프가드들이 수상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모아주택산업 전 종무이사 경찰 수사 받아

계열사 이용 재산증식 의혹 등 집중 추궁

모아주택산업의 계열사를 통한 재산증식에 대한 의혹이 부풀고 있는 가운데 회사 핵심 인사가 최근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내용에 시선이쏠리고 있다.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모아주택산업 전 종무이사 김 모씨는 지난 24일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가 모아주택 총무이사 재임 당시 회사자산을 훔쳤던 위치였던 민족 계열사를 이용한 재산증식 과정이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 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씨가 본인 소유와 본인

이 대표로 재직했던 한아조경(이후 한아건설(주)로 변경)의 소유인 과 성군 옥과면 소재의 부지가 모아주택산업 또 하나의 계열사로 알려진 한두레농산(주)에 매각되면서 자금 세탁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비자금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김 씨가 토지매입 자금의 출처와 한두레농산의 자금의 흐름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한아건설 전신인 한아조경의 설립 과정에서 출자된 자금 규모로는 옥과면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

매입 자금 출처도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역 재계에서는 “계열사를 이용해 이렇게 재산증식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 자행되었다면 실질적 오너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홈페이지: www.i-hanam.com
전화번호: 062-224-6600 팩스: 062-222-5540

강제추행 문화전당 용역 직원 기소 의견 송치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용역업체 부하직원의 신체 특정부위를 민진 혐의(강제추행)로 용역업체 직원 A(61)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4시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한 건물 앞에서 자신과 근무를 교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부하직원 B(45·여)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가 날씨가 좋다며 다가와 자신의 신체를 더듬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손이 외투 위를 잡깐 스쳤을 뿐이며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B 씨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28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금리 대출·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들 덜미

무등록 고금리 대부 업체를 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체무자를 협박한 혐의(대부업법 위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 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 인터넷 대출 직거래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려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 체무자 3명에게 법에서 정한 이자율(최고 연 24%)보다 높은 최고 연 899%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하지 못한 체무자를 협박한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급한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회사원에게 원금의 30%를 선이자 명목으로 떼고 빌려준 뒤 매달 임의로 이율을 계산·적용해 상환율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지역 내 카페 등지로 불리 대출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사본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부 끼어 12억원 챙긴 일당 검거

도박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주부들을 끼어 돈을 빼돌린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사이트로 주부들을 유인한 뒤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총책 A(32)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 씨를 도와 시기 행각을 벌인 B(32)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주부들에게 ‘수익률이 좋은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면 대신 배팅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을 가짜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뒤 보유금액을 조작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333명으로부터 12억 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화 내용이 암호화된 메신저 텔레그램과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사용했다.

또 총책, 카페관리책, 현금 인출책, 도박사이트 운영책, 대포통장 공급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구속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9일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송금책 A(6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정보를 제공한 B(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2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은행 앞에서 B 씨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인출해 건네자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65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대출받는 과정이 수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A 씨의 인상착의 사진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뉴시스

